

데스크 시각

‘분권형 개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 후 식 편집부국장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반대에도 22조 원을 들여 ‘단군 이래 최대 토목공사’라는 4대강사업을 강행했다. 임기 내 완성을 위해 영산강의 승촌보 등 16개 보(水) 공사를 불과 3년 만에 끝내버렸다. 그 과정에서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은 무시됐다. 이후 4대강 곳곳에서는 수질악화와 환경파괴, 생태계 교란이 확인되고 있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총체적 부실로 판명났다. 이를 개선하는데 수십조 원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차라리 원상 복구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호남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영남 인맥 중심의 불통 인사를 되풀이하고 있다. 그 와중에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예산, 인사, 공약이행 등 각 분야에서 홀대를 절감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2기 내

각에서 호남 출신 장관은 단 한 명에 불과하다. 군사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라 한다. 5년 전 90%대에 이르던 광주·전남의 국비비율은 올해 50%대까지 추락했다. 승자 독식의 ‘제왕적 대통령’ “나를로 국정운영”은 비단 이들 대통령의 전유물은 아니었다. 1987년 개헌 이후 직선제로 뽑힌 대통령 상당수가 국가 중대사를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였다. 임기 5년을 보장받은 대통령에게 힘이 쏠리면서 나타난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다. 친인척 비리 등 부정부패를 양산했고 권력의 오남용도 잇따랐다. 성과에 급급한 무리란 정책 추진이나 책임정치의 실종, 조기 레임덕(권력누수현상)은 단임제가 낳은 부작용으로 꼽힌다.

여야가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채 150일간 극한 정쟁만 일삼은 최근의 ‘불임국회’도 이와 무관치 않다. 모든 권력이 대통령과 행정부에 집중되다보니 입법부는 거수기로 전락하고 삼권분립은 말뿐이다. 특히 승자 독식의 선거에서 51대 49로 이긴 차는 49의 의견을 수렴하기는커녕 외면하고 심지어 적대시한다. 안철수 의원은 “우리 정치는 승자 독식이 반복되기 때문에 결국 중요의 악순환에 빠진다”며 “여야 야 누가 이기는 국민의 절박이 절

망한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독재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한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7년째 이어진 ‘87년 체제’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개헌론자인 우윤근 의원 등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권력 남용으로 인한 폐단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사립보다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다. 중앙집권의 폐해를 바로잡고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도 헌법에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을 공론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유력 정치인 한두 사람에게 의해 제기되던 과거와 달리 정치권의 공감대가 높다는 얘기도. 개헌 논의가 대통령 임기 초반에 진행되는 것도 좋은 신호다.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차기 총선·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자 시절 대통령 중임제를 비롯한 개헌

상생의 권력구조로 개편해야

정치권에서는 지난해부터 국회의원 도입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진행 중이다. 148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1일 만나 올 연말까지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을 공론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유력 정치인 한두 사람에게 의해 제기되던 과거와 달리 정치권의 공감대가 높다는 얘기도. 개헌 논의가 대통령 임기 초반에 진행되는 것도 좋은 신호다.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차기 총선·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자 시절 대통령 중임제를 비롯한 개헌

과제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적 요구도 높다. 상당수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 헌법 개정의 큰 틀로는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하고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내각책임제 등이 거론된다.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전문위는 지난 5월 6일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회양원제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내놓았다. 대통령은 통일·외교·안보 등 주로 외교에 전념하고, 국무총리에게 행정부 수반 지위를 부여해 내치를 전담하도록 했다.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국민 직선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조문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여권 핵심부는 개헌 논의에 부정적이다.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향후 개헌 논의에는 국회의원들의 추진 의지와 국민적 공감대가 관련이 될 전망이다. 최근 출범한 여야의 혁신 특위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저 지지율에 허덕이며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을 추스르고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모으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who@kwangju.co.kr

은편칼럼

폐강을 피해 살아남는 강좌가 되려면



이 병 우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교수

쪽으로 폐강된 강좌가 수십 개 공지된다. 학교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통 수강생이 10~20명 이내면 폐강된다. 시간강사로서는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 되어 피해가 이면제 아니냐고, 전임교수도 책임시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큰 집이 된다. 필자도 이번에 수강학생이 적어서 강좌가 폐강됐다. 내심 ‘학생이 너무 많으면 어쩌지?’ 하고 걱정했는데 우스운 꼴이 되고 말았다. 그동안은 주로 전공과목을 강의해서 폐강의 위협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 있었는데 이번엔 교양과목이어서 꼼짝없이 당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니 교양강좌의 어려움을 실감하게 됐다. 대부분의 신입교수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대학에 적응한다는 말로 위안을 삼고 있다. 나름대로 원인을 찾아보고 몇 가지 소회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무엇보다 제목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전공과목이 아닌 교양과목은 일단 어렵게 느껴지면 학생들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 이미 각 대학은 딱딱한 교양강좌의 이름을 바꾸고 내용을 일부 보완하는 ‘포장 바꾸기’에 적극 나선 지 오래다. 이

번에 살아남는 강좌를 보면 ‘일재생성’형 학교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통 수강생이 10~20명 이내면 폐강된다. 시간강사로서는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 되어 피해가 이면제 아니냐고, 전임교수도 책임시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큰 집이 된다. 필자도 이번에 수강학생이 적어서 강좌가 폐강됐다. 내심 ‘학생이 너무 많으면 어쩌지?’ 하고 걱정했는데 우스운 꼴이 되고 말았다. 그동안은 주로 전공과목을 강의해서 폐강의 위협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 있었는데 이번엔 교양과목이어서 꼼짝없이 당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니 교양강좌의 어려움을 실감하게 됐다. 대부분의 신입교수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대학에 적응한다는 말로 위안을 삼고 있다. 나름대로 원인을 찾아보고 몇 가지 소회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무엇보다 제목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전공과목이 아닌 교양과목은 일단 어렵게 느껴지면 학생들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 이미 각 대학은 딱딱한 교양강좌의 이름을 바꾸고 내용을 일부 보완하는 ‘포장 바꾸기’에 적극 나선 지 오래다. 이

쓰고 계속 원칙을 고수해야 하는지. 어떤 교수는 강의계획서를 성의껏 자세하게 기록했다니 수업이 뻑뻑할 것 같다고 수강생이 적어서 폐강되고, 강의계획서를 대충 빈칸으로 둔 강좌는 수업이 실성할 것 같아 수강생이 몰린 것을 보고 어이없어 했다. 대학의 강좌마저도 제목으로 낚시질(?)을 해야 하다니 말이다. 교수의 강의계획서는 일종의 자기소개서라고 한다. 학생의 까다로운 선택 기준을 통과하려면 전략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말이다. 교수의 강좌를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수강하는 일은 소편하우어 시대부터 쪽 내리는 일이다. 대학의 강좌는 어디까지나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편하고 쉬운 길을 찾으려는 학생들의 선택경향과 교육자로서 추구하는 방향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갈등이 대학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 고

‘저출산 극복’ 국가가 발 벗고 나서야



송 광 운 광주 북구청장

것이다. 저출산 현상의 지속은 초혼연령이 상승한데다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담,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이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겠으나 셋째아이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해주지 않거나 학비 보조에서 제외하는 등 당시 정부의 출산억제정책 또한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1.22명으로 세계평균 2.5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하락했다. 이 상태로 간다면 2020년에는 성인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2040년에는 성인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하는 고령국가가 되고 만다. 그렇다면 출산정책의 선진국인 스웨덴과 프랑스는 어떻게. 스웨덴은 자녀학비를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임신기간 중 의료비나 출산비까지 100% 지급한다. 또 자녀가 2명이면 20세까지 정부가 가족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 프랑스 또한 출산에 관해서는 우리

돈으로 무려 48조에 해당하는 예산이 투입된다. 위 두 사례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저 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우리 북구는 전체 예산의 67%가 복지예산으로 투입되어야 할 만큼 재정 운용이 녹록지 않음에도 저 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2009년 ‘저출산고령화담당’팀을 신설했고 지난 5년 동안 출산축하금 지급과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는 가정에 대한 재가양육비 지급, 둘째아이 이상 가정에 병원비 일부 지원 등 다양한 저 출산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아직 제자리걸음이다. 이 때문에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결혼이나 출산, 육아, 가족 관련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 보육시설의 확충과 지원에 힘써야 한다. 또 장기적으로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지원제도 및 기구를 구성하는 등의 보다 근본적

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출산율 상승실적에 집착한 예산 투입보다는 일과 가정의 양립 속에 출산과 양육이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양질의 교육 환경, 안정적 일자리, 그리고 긴장도를 낮추고 행복도를 높이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가 가족 해체를 막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열쇠’다. 출산율을 한 두 가지 단편적 정책으로 급격하게 변화시킬 사안으로 봐서는 안 된다. 가정이 안정되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국가적 역량을 모을 때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견고하게 올라갈 것이다. 출산율 저하 현상은 대한민국의 큰 위기상황이다. 즉 우리는 지금 피부로 못 느끼는 큰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각종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 국민이 나서 애국심으로 극복했듯이 이제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 나설 차례다.

社 說

세월호와 유사한 홍도 유람선 안전불감증

지난달 30일 오전 9시 14분께 신안군 흑산면 홍도 인근 해상에서 신안 선적 유람선 바강스호(정원 355명)가 압초에 좌초되면서 승객들이 충격에 휩싸였다고 한다. 다행히 관광객 104명과 승무원 5명 등 109명이 모두 구조되긴 했지만 승객의 머리가 찢어지고, 배는 시커먼 연기를 내뿜어 아수라장이 됐다. 사고를 최초 신고한 이모(50)씨는 “기압과세인 만물상에 배가 접근하는 순간 굉음과 함께 멈춰 섰다”며 “당시 충격의 지위를 부여해 내치를 전담하도록 했다.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국민 직선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조문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여권 핵심부는 개헌 논의에 부정적이다.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향후 개헌 논의에는 국회의원들의 추진 의지와 국민적 공감대가 관련이 될 전망이다. 최근 출범한 여야의 혁신 특위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저 지지율에 허덕이며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을 추스르고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모으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좌초사고 역시 안전불감증이 주된 원인이라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유람선이 노후화된데다 높은 파도 속에 무리한 출항, 압초 위치를 잘 모르는 외지인 선장의 운항 미숙 등이 화를 자초했다. 이 유람선은 선령 27년으로 세월호보다 더 낡아 주민들이 “위험하다”며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냈지만 지난 5월 연장 허가를 받아 운항을 해왔다. 게다가 구명조끼도 줄에 묶어 꺼내기 어려웠고 낡아서 혼자 입을 수도 없었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점검을 그렇게 강조했지만 모두가 빈말로 드러난 것이다. 해경과 관계 당국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선사 측과 유람기관의 과실을 밝혀내고 그에 상응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전을 소홀히 하다 수백 명의 목숨을 잃었는데도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나오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호객행위 판치는 광주, 과연 문화수도인가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광주 대중교통이나 유혹가의 불법 호객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장거리 택시와 식당·술집의 손님 끌어들이기 작태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단속해야할 당국은 뒷집만 지고 있다. 호객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곳은 대안도로 광주 종합버스터미널과 공항의 택시 승강장 주변이다. 특히 심야에 터미널에 도착하면 목표와 나중, 화순 등 장거리 운행 기사들이 행선지를 외치며 가까이 다가서는 경우가 많다. 광주의 첫 관문부터 누구든 불쾌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도심 유혹가 근처에서도 손님 의증과는 상관없이 호객행위가 이어진다. 일부 술집 등에 고용된 아르바이트생들은 행인에게 일소 홍보물을 뿌리며 반 강제적으로 입장을 유도한다. 때로는 젊은 여성들의 신체를 과도하게 접촉하는 등 성추행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관계 기관의 감독과 단속은

부실하기 그지없다. 지난 8월 말 현재 광주시와 구청에 접수된 택시 호객과 합승행위에 관련 접수된 민원은 모두 81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택시 승차 유도가 59건이며, 민원 발생지역은 종합버스터미널이 4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처럼 무리한 손님 유치로 민원이 급증되지 않고 있지만 광주시는 올 들어 고작 4건을 적발해 각각 과태료 20만 원을 물린 게 전부다. 서구청은 이달 초 이틀간 직원 2명을 투입, 터미널 일원에서 택시 불법행위를 단속한 바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누구든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한심한 노릇이다. 내년에는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하고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열리는 등 광주는 본격적인 국제 문화도시로 발돋움한다. 수많은 외국인과 타지 사람들이 호객꾼 때문에 인상을 찌푸려야 되겠는가. 광주의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 해당업체의 자정 노력과 함께 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는 고대부터 금기시되어 왔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자 불임설’을 주장했다. 돈은 그 자체로 이윤을 낳을 수 없다는 뜻인데, 그는 이자 받는 행위를 맹렬히 비난했다. “고리대금업은 가장 미움을 받는 직업이다. 그런데에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화폐란 교환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기 이자로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중세시대 기독교역시 이자를 금해 왔다. 이자는 돈을 빌려준 시간에 대해 받는 일

면서 이 일은 자연스럽게 유대인의 몫이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에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구약성경의 구절을 근거로 이자를 받아왔다. 하지만 그런 유대인조차 이자를 ‘땀’이 받는 행위를 맹렬히 비난했다. “고리대금업은 가장 미움을 받는 직업이다. 그런데에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화폐란 교환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기 이자로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중세시대 기독교역시 이자를 금해 왔다. 이자는 돈을 빌려준 시간에 대해 받는 일

고리대금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